

지역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지자체 역량 총동원

- 행안부, 1월 23일(화) 17개 시·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
-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역량 집중 당부
- 행안부도 「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」 구성(1.18~)하여 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소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월 23일(화) 17개 시·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,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.

□ 우선,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(60%) 달성을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신속 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하였다.

※ 집행목표는 신속집행 대상액 283.6조원*(잠정)의 60%인 170.2조원 규모

* '23년 예산현액으로, '24년 대상액은 '23년 이월액 등을 반영하여 2월 초 확정 예정

○ 특히,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‘지방계약 한시적 특례’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,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·용역 등에 대해 조기에 계약을 추진하고, 선금·기성금 등을 최대 지급하도록 하였다.

* 입찰보증금 경감(5→2.5%), 대가 신속지급(5→3일), 단독입찰·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

○ 또한,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, 인·허가, 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다.

□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」(단장: 행정안전부 차관)을 구성하였으며('24.1.18~), 지역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.

- 이 밖에도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와 지방재정의 누수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주요 지방재정 현안을 17개 시·도와 함께 논의하여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-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이 중요하다”라면서, “재정집행의 혜택이 주민과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량을 총동원할 것”이라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성철 (044-205-3702)
		담당자	사무관	이화령 (044-205-3704)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	책임자	과 장	김수경 (044-205-3771)
		담당자	사무관	이범수 (044-205-3777)

